

이재명, 역대 최고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최종 득표 89.77%...김동연 7%·김경수 3%

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호남서도 89.04% 압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전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과 선거인단(일반국민)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

했다. 김동연 후보는 5.46%, 김경수 후보는 3.01%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지난 26일 세 번째 순회경선인 호남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충청과 영남을 합한 누적 득표율은 89.04%로 집계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광주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88.69%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후보가 7.41%로 2위, 김동연 후보가 3.90%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충청권·영남권에 이어 이날 호남권을 합한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 89.04%, 김동연 6.54%, 김경수 4.42%로 집계됐다.

호남권 투표율은 53.67%로 조사됐다. 선거인단 37만4141명 중 20만 809명이 투표했다. 앞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율은 충청권이 57.62%, 영남

권이 70.85%였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 걸치서는 1.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다만 호남권 권리당원 수가 같은 기간 20만여명에서 37만여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투표율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호남 경선만 봐도 지난 대선 경선보다 8만명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더 했다”며 “그만큼 정권교체, 내란 종식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간절하고 강력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했다.

투표율에 대해선 “당원 숫자가 많으니가 낮을 수 있다”며 “절대적인 당원 숫자가 늘어났으니 그런 점을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 때문에 지방 모두가 홀대받았다”며 “보수정권의 잘못된 분할지배 전략으로 호남을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 중에서도 호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균형발전은 지방 배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 성장·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위를 차지한 김동연 후보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의연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론 조사가 남아 있기에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서 정견발표 나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

지난 2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선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겠다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해 당선 가능한 후보 중

심으로 (지지하자는)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정권교체 이후 차기 정

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발하고 뛰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기 기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재점화...치밀한 전략 시급

민 후보들 “의대 신설” 핵심 공약...국힘도 거부 힘들어

“큰 산 넘었다”·“의료 격차 해소”...2027년 개교 목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국립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전남의 30여년 숙원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큰 산을 넘었다” “의료격차 해소에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반응 속에 2027년 개교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역단

체장을 경험한 이재명·김동연·김경수 예비후보 모두 민주당 경선 합동토론회와 SNS, 인터뷰를 통해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라는 사실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될 경우 의대 신설에 당·정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입’과 ‘총리답화문’을 통해 대

국민 약속을 한 터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의 호남권 의대 공약은 투트랙이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공·사립 통틀어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는 전남에는 국립 의대 신설을, 전북에는 기존 국립 의대(전북대)와 별개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승계한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설립 주체는 국립 의대는 교육부, 공공의대는 보건복지부이고, 국립 의대는 기존 국립대 내 의대, 공공의대는 권역별 국립대 내에 설치되거나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의대는 서울 8곳, 강원·부산·대구 각 4곳, 경기·충남 각 3곳, 인천·대전·전북·광주·충북 각 2곳, 경북·울산·경남·제주 각 1곳씩 전국적으로 모두 40곳이 분포돼 있으나, 전남은 열악한 의료 환경에도 전무한 실정이다.

‘졸업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는 전북의 10년 숙원으로, 20,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사회 반응도 뜨겁다.

의대 교수 출신인 범희승 전 전남 의대 설립 범도민주진위 집행위원장

은 “일단 큰 산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 의대 신설이라는 뜨거운 화두를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받아주셨으니 이제 열심히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내 의료 완결성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라고 반겼다.

의대 설립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수평적 통합과 ‘2개 이상의 국립대가 단 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을 통합국립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품은, 26년 만의 고등교육법 전면수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전남 의대 신

설이 대선을 변곡점으로 부활하면서 치밀한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내년 의료인력 수급추계 과정에서 정원 배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하고, 대학 신설과 함께 추진될 상급 부속병원 건립 예산(국가 부담 25%)은 어떻게 해결할 지도 숙제다.

졸업 후 수도권 등으로의 역의유출을 막고 소위 ‘의료계 남방한계선’을 무력화할 비책은 뭘지, 특별법 제정도 답이 필요하다. /김 호 기자

더현대 광주 보완 완료후 허가 2면

“박선영 위원장 사퇴하라” 3면

5월 동행축제 4면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측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